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65
----------	------

발의연월일 : 2024. 9. 23.

발 의 자 : 김종양 · 주호영 · 김태호  
조승환 · 박성훈 · 김미애  
정연욱 · 이현승 · 고동진  
김기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죄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

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 조제7항 신설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第10項”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본문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 ⑦ 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제5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에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

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기탁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제8항 전단 중 “제49조제10항”을 “제49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제49조제12항”을 “제49조제13항”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에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전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선거비용을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비용 등의 미반환자의 후보자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의 접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⑥ (생략) <u>&lt;신설&gt;</u>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u>
<u>⑦ ~ ⑩</u> (생략)	<u>⑧ ~ ⑪</u>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u>⑪</u> 누구든지 選舉期間중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u>第10項</u> 의 規定에 의하여 回報받은 前科記錄을 閱覽할 수 있다.	<u>⑫</u> ----- ----- <u>제11항</u> ----- -----.
<u>⑫</u>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u>제10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舉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u>⑬</u> ----- ----- <u>제11항</u> ----- ----- -----. -----.
<u>⑮</u> (생략)	<u>⑮</u>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候補者登録후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録은 無效로 한  
다.

1. ~ 4. (생략)

<신설>

5. ~ 11. (생략)

② ~ ④ (생략)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

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거관

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

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

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

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⑤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⑦ (생략)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

⑨ (생략)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

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기탁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제49조제1  
1항-----.  
-----  
-----  
-----  
-----  
-----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  
-----제

<p><u>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u> <u>경우는 제외한다).</u></p> <p>⑪ · ⑫ (생략)</p> <p>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p> <p>① ~ ④ (생략)</p> <p><u>&lt;신설&gt;</u></p>	<p><u>49조제13항</u>----- -----.</p> <p>⑪ · ⑫ (현행과 같음)</p> <p>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u> <u>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u> <u>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u> <u>에 의하여 고발된 때(비례대표</u> <u>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u> <u>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u> <u>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u> <u>범하여 기소 또는 고발된 때를</u> <u>말한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u> <u>때까지 선거비용 전액의 보전</u> <u>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u> <u>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u> <u>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u> <u>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u> <u>에는 유예한 선거비용을 지체</u> <u>없이 보전하여야 한다.</u></p> <p>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	---